

## 산업자원부 국정개혁과제 추진방안

「경제재건」을 위해 주도적 역할 수행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난 3월 31일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개혁과제 추진방안을 보고하였다.

이 자리에서朴장관은 금년에 산업자원부가 「경제재건」을 위하여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21세기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성장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3가지 국정개혁과제의 추진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하였다.

① 무역흑자 250억불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총력체제를 가동하고, 수출경쟁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기존시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대체·틈새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하면서, 각료회담·산업협력사절단 파견 등 산업경제외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 150억불을 유치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철학과 획기적으로 개선된 투자환경을 집중홍보하고, 외국인투자유치체계의 일원화로 완벽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APEC투자박람회를 통해 투자유치 확대와 함께 경제위기 극복상황을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② 그리고 21세기를 대비한 산업의 지식기반화를 촉

진해 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지식기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21세기의 수출·성장·고용창출을 주도하고, 자동차·석유화학 등 중화학 공업은 업종전문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섬유·신발 등 경공업은 지식집약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화하고,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산업조직을 재편해 나갈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③ 마지막으로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대기업 사업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율적 합의와 상호이익 존중의 협상원칙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기타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강화하고, 부실기업인 한보철강과 한라그룹 처리를 조속히 매듭지을 계획이며,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을 가속화해 나가면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미 개정된 법률의 하위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잔여규제를 재검토하여 과감하게 폐지 또는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 원전기술 고도화로 원자력 기술선진국 도약

산업자원부, 원전기술 고도화계획 확정·발표

산업자원부(장관 : 朴泰榮)는 원전기술의 독자능력 확보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전략으로 국가 원전기술 고도화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그동안 국내 원자력산업계는 기술습득, 기술도입 단계를 거쳐 원전기술자립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우리 자

체의 기술능력으로 한국표준형원전을 설계·건설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으며, 또한 원전의 운영 및 정비경험을 통해 우수한 기술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팔목할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을 활용할 능력(Know-

how)은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을 원천적으로 개선·응용 할 수 있는 능력(Know-why)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WTO 체제하의 국제 무역환경 변화와 정부조달 협정 체결에 따른 원전기술 선진국들의 시장개방 확대요구, 지적재산권 보호 추세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원전기술 고도화계획은 '95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원전건설기술자립계획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기존 산업체주도 원자력연구개발계획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2006년까지 원전건설 및 운영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독자 기술능력 확보라는 최종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분야별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원전계측제어설비 국산화, 원전설계코드(전산프로그램) 국산화 등 27개 대과제를 선정하여 2006년까지 8년간 정부예산 및 한전 연구개발비 등 약 5000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기술개발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국내 원자력산업계가 전문기술별로 역할분담 하에 추진하게 되며, 원전산업 발전에 전략적 가치가 있는 기술 및 기술수준 향상에 직결되는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개발해되, 기술개발과 동시에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용화에 우선순위를 둘 방침이다.

특히, 기자재 국산화에 있어서는 원전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충분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과제를 과감히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고도화계획이 2006년 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우리나라는 원자력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하면서 원전기술의 독자적 수출이 가능해 질 것이며, 원자력발전의 경제성과 안전성 향상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이행문제의 해결과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리 원자력 2호기 Y2K에 안전함을 확인

종합실증시험 결과 원전 안전성에 전혀 문제없어

한국전력공사(사장 : 張榮植)는 지난 3월 2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한 고리원자력 2호기에서 Y2K 종합실증시험을 실시하여 Y2K 문제가 발전소 안전운전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음을 입증하였다.

이날 시험은 원전 안전의 투명성을 위해 부산 KBS 등 언론사와 지역주민대표, 민간환경감시기구, Y2K 전문가, 지방의회 의원,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운전중인 원자로의 컴퓨터 날짜표시를 1999년 12월 31일 23시 40분으로 설정한 뒤 2000년 1월 1일로 진입하는 과정과 2000년 2월 29일을 입력한 상태(윤년시험)에서의 원자로 안전성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신고리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지역단체에서는 지난 1월 고리 4호기에서의 시험이 100% 전출력이 아닌 24% 출력에서 수행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었으나, 이번 100%에서의 성공적인 시험수행은 이와 같은 불신 해소와 더불어 신고리원전 건설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전은 작년 5월 張榮植 사장 취임 이후 IMF 체제 등의 어려운 경영 여건 하에서도 「원전은 안전 제일주의」라는 확고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Y2K 문제 해결 전담조직을 발족시켜 Y2K의 영향을 받는 부속품의 전면 교체 등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99 대체에너지 보급자금 응자 총 333억원을 지원

산업자원부는 세계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대체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으로 2006년까지 국내 총에너지의 2%('97년말 현재 0.8%)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할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시설에 장기저리로 응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33억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지원분야는 태양열온수기, 태양광에너지, 소수력에너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석탄이용기술, 풍력에너지 등 8개 분야이고, 지원조건은 소요자금의 90% 이내이며, 이번에 지원되는 응자금의 이자율은 연리 5.5%로서 지난 해(연리 7%)보다 1.5% 하향조정

하였고, 연간지원 한도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동일사업자당 자금이용 규모를 확대하였다.

대출방법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 신청하는데, 가정용 태양열 온수기(2백만원 이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수요자가 직접신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대체에너지 보급현황은 '98년 말까지 태양열온수기 약 17만기, 태양광 이용시설 2,500kW, 풍력발전시설 1,600kW, 폐기물 이용시설 450개소, 소수력 발전시설 37,000kW, 바이오 이용시설 100여기가 공급되고 있다.

## 韓電「제2의 건국」운동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에 진력

### 電氣關聯 단체장회의 개최

한국전력(社長 張榮植)은 「제2의 건국」 실천 분위기를 관련업계 전체로 확산하여 국민의 기업으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구현하고, 유관기관들간의 「제2의 건국」 실천을 위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취지하에 지난 2월 23일 한전 본사에서 전기관련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張榮植 한전 사장을 비롯하여 朴祥基 한전기술 사장, 張東洙 전기협회 부회장 등 전기관련 단체장 36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尹宰淳 한전 부사장의 제2의 건국 추진사례 및 향후 계획 소개를 시작으로, 「제2의 건국 운동으로 다시 시작하자」란 주제로 李鎮淳 KDI 원장의 특강이 이어졌으며, 제2의 건국 운동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오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특강에서 李鎮淳 원장은 우리가 당면한 경제위

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DJ 노믹스의 핵심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2의 건국 실천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한전은 그동안 「제2의 건국」운동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전직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작년 9월부터 자체 중앙연수원 연수과정에 「제2의 건국」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실천강령을 제정하여 노사합동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설에는 제2의 건국 스티커 100만매를 제작하여 귀성객에게 배포하는 등 국민의 기업으로서 「제2의 건국」운동을 선도하고 있다. ■

덴마크의  
環境研修센터  
풍력발전의 보급에 전력

덴마크 Jutland반도의 자연이 우거진 땅에 「바람(風)의 학교」 가 서 있다. 세계 최첨단을 가고 있는 덴마크의 환경정책과 환경교육에 관하여 배우는 연수센터로서 6헥타르의 광대한 용지에 있는 건물을 인수하여 '97년 3월에 개원하였다.

이 연수센터는 「풍력발전(風力發電)」 이란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시작」 했으며 지금까지 아세아 국가에서는 일본에서 150명이 연수를 위해 방문했다고 한다.

덴마크는 풍력발전의 세계 최첨단국이다. 「에너지와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나라는 풍족하게 살지 못한다」는 생각을 덴마크는 실천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풍력발전이 시작된 것은 1887년부터이다. 이후 '98년 상반기까지의 풍차 설치대수는 5천대에 이르며, 총 설비용량은 124만kW라 한다.

이 중에서 개인·공동 소유가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에는 풍력발전설비의 매상고가 약 15억 달러에 달해 농업제품, 의약품 다음의 산업으로 성장하여 고용인원이 1만 2천명에 이르고 매년 수요가 20%씩 늘어나는 대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덴마크는 2025년까지 석탄화력을 모두 폐쇄하고 그만큼을 풍력발전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 해안에서 20km 들어간 해안지역에 최종적으로 400만kW의 발전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다.

1기 1500kW의 풍차를 매년 100대 씩 세운다는 계획으로 2030년에 400만 kW의 「바다」의 발전설비가 완성되면 이것으로 덴마크 국내 에너지소비의 50%를 커버하게 된다고 한다. 생활환경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덴마크의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바람의 학교」에서는 「바이오 가스」 이용에 관한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축산업 국가로서 가축분뇨의 바이오 가스를 이용한 코제너레이션(열병합발전) 시설도 전국에서 볼 수 있다.

풍차의 가격은 1kW당 900달러 정도로 초기비용이 다소 들어가지만 운전비용은 거의 들지 않아 1대 건설에 들어간 에너지(비용)를 3개월에 벌어들이게 되므로 내용연한을 20년으로 볼 때 80배의 에너지 효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를 설치하여 조사·연구하고 최근 「전자계의 실태와 실험결과에서 얻어진 성과를 기초로 평가해 볼 때, 통상적인 주거환경에 있어서 전자계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고서를 완결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기공학 및 의학·생물학의 전문가가 모여 '95년부터 검토를 해 왔으며 국내외 학술논문에 대한 신뢰성·타당성도 검증했다.

전자계의 건강영향문제는, '79년에 미국의 웰트하이머와 리퍼가 발표한 '자계(磁界)와 소아(小兒)암'에 관한 역학(疫學) 연구의 결과 중에 「배전선 부근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백혈병의 발생률이 높다」고 시사한 것이 시초가 된다. '90년대에 들어서는 '92년 스웨덴의 카로린스카 연구소의 연구원이 자계와 소아백혈병의 관련성을 시사한 것을 계기로,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전자계와 사람의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한 역학연구결과가 몇 가지 발표되었고, 작년 7월에는 미국의 에너지省(DOE)과 국립환경건강과학연구소(NIEHS) 등이 추진해 온 「EMF-RAPID 계획」의 위킹그룹 보고서(안) 가운데 「(전자계는) 사람에 대해 발암(發癌)성이 있을 가능성 있다」라고 기술된 내용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 접한 일본 전기학회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 電磁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목적으로 '95년 12월에 「전자계생체 영향문제 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검

日 電氣學會, 電磁界의  
生體영향 조사  
통상적인 환경에서는 문제 없음

일본 전기학회(회장 : 太田宏次 中部電力 사장)는 전자계(電磁界)가 사람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전기계생체영향문제 조사특별위원회」

토를 개시했다. 이 위원회에는 전기공학·의학·생물학의 전문가가 참가, '91년부터 '98년까지 국내외 학술논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주로 300Hz까지의 「極低周波數 영역의 電磁界」에 관한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구체적인 검토는, 전기공학적 측면에서 신체 주위의 전자계의 실태에 대해 조사하는 「제1작업부회」(주사 : 宅間董 교토大 교수)와, 의학적 측면에서 생체에 대한 영향문제를 평가하는 「제2작업부회」(주사 : 上野照剛 東京大 교수)에서 실시되었다. 이 결과 통계상 전자계와 건강영향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고 또 磁界에 대해 드러낼 것이 명확치 않으며 증례(症例)수가 적어 통계적 정도(精度)도 낮아, 결과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보고서를 완결하였다.

## 中, 국산브랜드 소비 증가

### 소비자 조사 실시 결과

'98년의 중국 전국 주요도시의 소비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국 국산브랜드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것은 전국의 省都, 區都에 大連 등 주요도시를 포함한 2800만호, 9200만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양케이트를 실시한 결과이다. 40개 종류의 일용소모품과 20개 종류의 내구소비재 합계 60개 종류에 대해 실시되었다. 조사는 중앙텔레비전, 人民日報,

北京華聞旭通國際廣告有限公司가 시행하였다.

내구소비재에서 신장된 것은 에어컨, VCD, 휴대전화로 소유율은 각각 30.9%, 30.6%, 12.8%로 '97년의 26.9%, 14%, 5%에서 급증하고 있어, 서민의 생활향상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퍼스컴은 7.4%로 아직 낮은 실정이다.

60개 품목 중에서 회답이 많았던 것은 네스레코피(85.7%), 앤마하일렉톤(58%), 인스턴트라면(51.4%), 코카콜라(48.2%) 등이다.

중국국산품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유산음료(9.3%), 냉장고(18.4%), 햄소시지(38%), 식물성 식용유(28.2%), 세탁기(19.4%), 컬러텔레비전(19%), 엽권련(15%), 소주(10.9%), 전지(19.5%), 다이어트식품(21.1%) 등이다.

국산품 보급에서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지방의 보호주의인데, 중국에는 아직도 그 지방산 제품만 사용하게 한다는 악폐가 만연하고 있다고 한다.

## 전력소비액제분의 CO<sub>2</sub> 배출량 산정 ■ 전력과 가스·석유, 배출원 단위로 대립

일본에서 금년 4월 시행을 위해 환경청이 작성하고 있는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의 政令 가운데 전력소비 억제에 따른 이산화탄소(CO<sub>2</sub>) 배출량의 산정방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석유업계 중심의 화력발전 CO<sub>2</sub> 배출원단위(kWh당의 CO<sub>2</sub> 배출량)를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전력업계가 화력, 수력, 원자력을 포함하는 전체 전원평균 CO<sub>2</sub> 배출원단위로 해야 한다고 반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의 주장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어서 환경청은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온난화대책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구온난화방지 조치계획을 책정하여 매년 온실효과가스의 총 배출량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총배출량 산정방법은 政令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환경청은 현재 4월 시행을 위해 政令 책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론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력사용량을 억제하였을 경우의 CO<sub>2</sub> 배출량의 산정방법이다. 일반적으로 CO<sub>2</sub>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을 포함한 전체전원 평균원단위를 채택하면 CO<sub>2</sub> 배출량은 축소되고 역으로 화력원단위에서는 확대된다.

가스·석유업계에서는 전력수요에 따른 조정은 피크전원인 화력발전이 하고 있으며 전력소비 억제에 의한 CO<sub>2</sub> 배출량의 산정은 화력원단위를 채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력업계는 원자력, 수력, 화력을 포함한 전체전원 평균 배출원단위쪽이 실제의 배출량을 반영하고 있는 정확한 수치이며, 단기적이고 소규모의 수급조정은 화력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체전원을 조합한

베스트믹스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스·석유업계로서는 화력원단위를 채용함으로써 도시가스 등을 사용하는 코제너레이션 시스템의 전력에 대한 환경 우위성을 확보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력측은 전력사용에 따라 실제로는 CO<sub>2</sub>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도 곁보기로는 증대될 염려가 있다고 보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환경청은 3월 하순까지는 政令 작성작업을 마칠 생각이어서 앞으로 작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력업계와 가스·석유업계의 출다리기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ABB, 「기술, 서비스,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新經營 전개

파급한 리스트럭처 주효

유럽 최대의 중전기기 메이커인 스위스·스웨덴 국적의 ABB는 이번에 취리히에서 세계의 ABB그룹 '98년 업적발표 회의를 가졌다. 요란 린달 ABB 사장겸 최고경영책임자(CEO)는 「기술, 서비스, 글로벌화의 세 관점에 입각한 경영 신전개의 결승점에 다가섰다」고 선언하였다. '97년에 착수한 리스트럭처(사업의 재구축)의 90% 이상을 앞당겨 종료함과 동시에 조직개혁과 우수기업의 매수, 독일회사와의 합병해소 단행 등으로 순이익

을 전년대비 11% 증가시킴으로써 린달체제가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린달사장이 '97년에 내건 경영전략은 우선 리스트럭처로 경쟁력을 높이고 중전기기 엔지니어링만의 "무거운"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기술·지식, 서비스 집약형 기업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특히 리스트럭처에서는 종래에 주력했던 유럽과 미국에서 통합과 인원삭감을 추진하는 한편, 아시아 등 신흥시장에의 시프트에 전념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96년에 21만 5천명이었던 세계의 종업원수는 '97년에 21만 3천명으로, '98년에는 20만명을 하회하여 '89년 수준이 되었다. 이로써 리스트럭처계획의 90%를 종료하고, 또한 예정보다 9개월 앞서 달성함으로써 기업의 수입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나아가 신경영전략의 일환으로 과감한 기업의 합병·매수(M&A)와 조직변경도 단행하였다. 오토메이션부문의 지렛대로 제어기기 시스템의 세계 최대메이커인 엘삭 베레를 21억불에 매수, ABB로서는 사상최대가 되었다. 또 '98년 9월에는 ABB의 특색이었던 「매트릭스 조직」을 재검토하여 지역별 책임체제를 폐지하고 제품 부문별로 하나로 합동 시에 4부문에서 7부문으로 확대하였다. 경영의 소프트화와 니즈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글로벌화의 기속화를 겨냥한 것이다.

즉 ABB는 린달사장이 의도한 경영전략의 결승점에 확실하게 접근한 것이다. '98년의 업적은 매상고 308억 7200만

불로 전년대비 1% 감소했지만 경영이익은 5% 증가하였으며, 특히 순이익은 13억 500만불로 전년대비 11% 증가하여 두 자리수의 대폭적인 신장을 실현하였다. 이것은 규모보다도 이익을 중시하는 체질전환을 반영한 것으로서 '99년에도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동유럽이 전년대비 33% 증가, 미국이 전년대비 17% 증가한데 비하여 아시아는 전년대비 49%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시아가 경제위기 가운데 있지만 「2, 3년 후에는 반드시 회복, 성장의 견인력이 된다」(린달사장)는 판단 아래 아시아를 중시한 방침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앞으로의 ABB를 전망하는 키가 될 것 같다.

요란 린달 ABB 사장겸 최고경영책임자(CEO)가 21세기의 기업발전의 중심축에 두는 것은 "기술"이다.

세계 140개국에 전개되고 있는 ABB 그룹의 연구개발비는 최근 10년간에 갑절로 늘어났다. '98년은 전년보다 감소하긴 하였지만 24억 6300만불로 매상고의 8%를 점하고 있다. 취리히의 교외, 대드워에 있는 연구개발(R&D)센터는 그룹의 중심두뇌이다. 거기서는 현재 아직 세계적인 과제로 되어 있는 컴퓨터의 2000년 문제에 대하여 타스크포스가 편성되어 사내와 유저기업에의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 비용은 '98년에 1억불, '99년에도 1억 5000만불을 예정하고 있으며, 약 천명의 전문가가 고객과의 문제해결에 힘써 오고 있다. □